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의**

2024. 05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의

I. 현황

-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의 가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요소이자, 정주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이기에,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임.
- 무엇보다 보건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면서 대면 서비스로만 제공이 가능한 국가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었을 때 미치는 사회 전반의 영향은 다른 어떤 자원보다 클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을 통해 지역 보건 행정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자원 배분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음.

- 하지만 2024년 1분기 기준, 경상남도의 의사 1인 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과 비교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무엇보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11개의 의사 평균연령이 55세 이상으로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의사 수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경상남도 의료 불균형 실태(수도권 대비)

항목	경상남도	전국평균	수도권	기준
의사 1인당 인구수(명)	585	459	408	'24
종합병원 60분 이내 접근불가율(%)	47.3	23.6	6.1	'22
응급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	50.7	21.0	2.6	'22
인구 10만면 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명)	44.3	42.6	42.2	'22

※자료 : 지역별 의료인력 통계, 인구통계를 기초로 창원상공회의소 작성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II. 문제점

- 이러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이루어진데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공공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간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의료 이용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구가 밀집하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이는 곧 각종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정부재정 투입에 따른 구축이 아닌 자유시장 논리로 운영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이나 구매력이 약한 지역은 의료서비스 공급의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 수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분야가 진료행위가 많은 영상의학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이 따르는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또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행위 수만을 기준으로 수가보상이 이루어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저하가 맞물려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의 붕괴가 야기되고 있으며, 붕괴의 속도는 가파른 인구감소와 의사 인력이 정주를 기피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더욱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경상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것에서도 그 이유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예산과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 수행에 대한 평가와 기술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지방정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이 필요함.

3. 건의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특히 인구 감소 등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수가 보상을 추가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024. 5.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	